

지역협력발전의 추세와 상응조치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소장 장온령 (張蘊嶺)¹

1. 지역협력발전 추세

지역협력은 현재 세계발전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이다. 전반적으로 아래의 3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보편성. 세계 각 지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역협력을 발전시키며 대부분의 국가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지역협력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90년 이래 세계적으로 지역협력의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중심으로 동시에 여러가지 협력관계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무역조직에 등록된 지역무역배치(RTA)는 거의 400개에 이른다.

둘째, 다양성. 세계적인 지역협력의 다양성은 두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협력내용의 다양성이다. 세계 각국의 지역협력은 경제협력을 위주로 하지만 정치, 안전, 사회, 문화 등의 다른방면의 협력도 전개하고 있다. 두 번째는 형식의 다양성이다. 쌍방 자유무역협정, 지역협력 조직, 긴밀한 조직제도의 건립, 느슨한 유형의 협력, 기능성 항목의 협력, 공동체건설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다방면. 현재 세계 지역협력발전은 다방면 특징을 보인다. 여러 지역협력이 서로 교차되기도 하고 하나의 국가가 여러 개의 지역 협력 항목에 참여하는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지역협력의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럽이다. EU는 먼저 지역내 시장통일을 실현했고 구성국 내부의 상품, 기술, 서비스와 인원의 자유적인 이동 및 화폐통일을 실현했고 현재는 유럽연맹 헌법을 제정

중이며 유럽연방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

하지만, 유럽의 방식을 다른 지역에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세계 각지에서는 현지 상황에 맞는 협력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미 자유무역지역은 시장개방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동남아국가연맹은 지역협력의 태두리 안에서 현지의 시장개방과 공동체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외부와의 협력을 전개하여 “10+1”, “10+3”과 “동아시아정상회담”의 구조 하에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상해 협력조직은 안전협력을 기초로 점차 기타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 중 주로 경제영역의 협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지역협력이 다변무역체제(WTO)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무역자유화 배치는 모두 WTO와 관련되며 상당수준에 있어 다변무역체계의 보충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협력은 참여하는 국가가 적어 협상의 진행이 빠르고 항목의 실행도 비교적 쉽다. 또한 차이를 더 자세히 고려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배려할 수 있어 종합적인 협력을 통해 참여자가 모두 이익을 얻도록 한다. 이것은 지역협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여러나라에서 환영받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2. 동아시아 협력발전 추세

동아시아의 지역협력발전은 비교적 늦게 형성되었으나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협력은 동아시아연맹에 의해 시작되고 추진되었다. 동아시아 연맹의 성공은 동아시아 전지역을 하나로 끓어 내부적인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여 공동체건립으로 향해가고 있다. 동아시아연맹은 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협력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협력의 주요 통로인 “10+3”, “10+1”과 “동아시아정상회담”的 진행은 동아시아연맹의 추진,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전반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경제협력을 위주로 한다. 동아시아 지역경제는 먼저 시장기구를

¹ 작가는 중국사회과학원학부위원, 국제연구학부주임, 교수, 아태연구소 소장이다.

통해 긴밀한 연계로 발전하여 투자 - 생산 - 무역 - 서비스 교환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망을 형성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전 동아시아 지역 내부의 무역 비율은 거의 50%에 이르렀고 이후 약간 하락하여 현재는 이미 53%에 이르고 있다. 경제협력의 주요내용은 동아시아 지역투자무역과 서비스의 개방을 한 단계 더 추진하여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고 지역의 금융, 화폐협력을 발전시켜 금융시장이 안정된 안전기구를 건립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둘째,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현지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변무역체제를 지지하여 지역의 배치와 다변체제의 규정을 일치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방구조를 유지하여 다종 협력구조 (APEC, 다종 동아시아협력기구) 를 지원하는 동시에 폐쇄적인 집단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으며 기타국가에게도 개방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있다. 개별 국가는 동아시아지역 협력에 참여하는 동시에 다른방면의 협력에도 참여하고 있다. 물론 “개방지역주의”的 유지와 협상체결진행의 구속성 및 배타적 협정 간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후자는 배타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적인 목표는 “동아시아 공동체”的 건립에 있다. 비록 동아시아 협력이 현재로는 경제협력이 위주이나 단순히 경제협력 (경제협력 역시 단순한 무역협력만이 아니며 금융, 미개발지역개발, 발전지속과 사회문화 등을 포함) 만은 아니다. 동아시아 협력고위총회의, 부장회의는 이미 정치적 성격 형성했으며 동시에 비전통적인 안전협력도 이미 시작되었다. 공동체건설은 동아시아협력 진행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후 협력의 내용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협력은 이미 분명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10+3”, “10+1”, “동아시아정상회담”기구 등의 정치협력구조 건립 외에도 금융화폐 영역에도 쌍방 화폐상호교환협력구조를 완성하였고 현재 지역협력 구조의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유무역구조 건립 방면에서는 현재 아직 해당하는

쌍방 과 “10+1”구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04년 “10+3” 경제부장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 실행성 전문가 조직의 성립을 결정하였다. 이 조직은 이미 경제부장과 정상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 보고에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 지역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2007년 협상진행을 건의하여 2020년 이전에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2007년 동아시아 정상은 두 번째 동아시아협력에 관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며 (처음은 1999년에 발표했음) 미래 10년의 협력을 기획할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협력의 진행과 목표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할 것이다.

3. 동북아시아 협력의 발전

동북아시아는 동아시아 및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국, 한국, 일본의 3국은 동북아시아 경제교류에 있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국의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도 한 단계 더 융합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제일체화는 직접투자의 주도 하에 내부무역과 관련 서비스활동으로 발생한 경제발전망이라는 점이다. 3국은 서로를 시장으로 하여 경제발전에 있어 서로 의존하고 있다. 현재 직접투자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경제발전 구조조정의 필요라는 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특징이 있어 한일경제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중국 경제의 발전정도를 높였다. 미래에는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 일본으로 유입되는 자본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보다 더 균형적인 경제 일체화구조를 창조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은 아래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 협력구조하에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10+3”을 주요역량으로 하여 동아시아 전체 협력진행에 참여하고 추진하

며 다른 한편으로는 3 국의 대화 및 협력기구를 발전시켜 이 둘을 상호보완하고 있다.

둘째, 제도성 협력의 자체. 한중일 3 국 고위층은 단지 “10+3”구조 아래에서 느슨한 대화협력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일본 고위층의 야스쿠니 참배로 인해 중단되었다. 3 국의 자유무역지역 건립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한일자유무역협정도 몇 년동안 끌어왔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중한협정은 아직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고 중일자유무역지역은 아직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3 국의 자유무역지역에 관해 중국이 일찌기 협상을 건의하였으나 아직 공동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기능성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 기능성 협력은 동북아 협력의 주된 형식이다. 한중일 3 국 고위층은 협력선언(2003년)을 발표하여 여러 가지 협력항목을 확립하였다. 3 국은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항구, 물류, 정보통신 등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전개하였으며 대부분 정부, 기업 간에 발생하였다.

한중일 3 국 간의 경제일체화는 제도의 투명성, 시장개방과 긴밀한 장기 경제협력이 필요하며 시장추진 일체화가 아직 안정되지 않고 있다. 확실한 제도가 설치되지 않으면 상업교역은 여전히 각종 장벽(관세와 비관세)에 의해 가로막혀있게 된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의 비관세 제한이 여전히 상당수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 국의 정치 상의 장애를 고려할 때 수준 높은 제도화 된 협력형태의 건립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능성 협력은 이후의 중점사항이 될 것이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방면에서는 3 국의 정부직능부문 간 부장, 고관과 집행층의 3급회의기구가 건립됐다. 2003년 10월 한중일 3 국 정상은 인도네시아 발리 성에서 《3자 협력공동선언》에 서명하여 무역과 투자편리화에 관한(세관, 교통, 품질감독, 검역 등) 영역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3 국 세관당국은 통관편리화를 위해 협력을 전개하여 화물의 통관을 신속하게 하

였다. 중한, 중일간에 이미 《세관상호협정》(CMAA)를 체결하여 한일 간은 현재 사전준비 중이다. 교통영역에서는 2000년 9월부터 동북아항구이사회를 소집하기 시작하여 항운, 투자, 자유무역지역과 항구설비 신설계 방안을 전개하는 연합,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영역에서는 3 자부장급회의에서 6개 영역(차세대 인터넷망(IPV6), 3G와 차세대 이동통신, 인터넷과 정보안전, 통신서비스 정책, 디지털 TV와 라디오, 소프트웨어 원 암호공개)에서 합의에 도달했으며 관련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 환경협력방면에서는 이미 황사모니터링과 조기경보시스템, 동아시아 산성비모니터링 시스템, 태평양 해역과 해안 환경보호 등의 영역에서 행동방안을 제정하여 실행 중에 있다. 기업의 발기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3 국은 IT 영역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 IT 표준과 인터넷(차세대 인터넷, 전화시스템 등)의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4. 도시협력의 잠재력

도시는 현대국가의 경제, 정치의 중심이다. 동북아 지역은 국제도시가 많으며 발전속도가 빠르고 잠재력 있는 중소도시도 많이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북아 국가 간의 유대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해안도시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대 “자매도시” 관계는 지리적 한계를 초월하여 각국 도시 간의 연계와 협력공간이 확대되어 상업을 위주로 했던 과거의 방식을 초월하여 정부, 기업과 민간부문에 직접적인 연계와 협력채널을 구축했다.

도시의 협력은 동북아 협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도시협력은 정부 간 협력, 기업 간 협력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포함한다. 협력방식도 다양하고 내용도 풍부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북아의 도시협력은 아래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 1) 도시 간 정부협력기구를 건립 및 강화하여 도시관리에 대한 교류와

- 협력을 진행하여 “도시우수관리”(good governance) 수준을 향상한다.
- 도시화는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추세로 특히 중국의 도시화는 빠른 발전단계에 있다. 도시의 우수한 관리와 정비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방면에 있어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여려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동북아 도시우수화 관리논단”을 건립하여 3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할 것을 건의한다.
- 2) 현대통신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하여 도시 간의 “정보고속도로”를 발전시켜 특히 연해도시 물류협력망과 같은 동 북아 시장 물류망을 구축한다.
- 3) 시장, 특히 대규모시장의 환경문제, 수자원부족문제와 에너지 가격상승문제에 대해 도시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과 수자원절약에 관한 협조를 전개하여 자매도시 구조를 통해 환경보호, 에너지절감, 수자원절약 기술의 추진과 양도를 추진한다.
- 4) 동북아 도시 시민 간의 교류를 추진하여 각계각층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문화논단”을 건립하여 문화가치, 시민생활, 지역관계, 노령화, 아동교육 등에 대한 교류를 전개한다. 동시에 도시가정 간의 교류와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매도시 구조 하에 동북아 도시 간의 “자매가정” 제도를 건립하여 동북아인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향상하여 평화적인 동북아 문화가치관 발전을 추진한다.